

환경부, 4대강 수변구역내 오염행위 단속 실시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와 편법을 이용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해당지자체와 합동으로 14개반 56명으로 단속반(환경·건축·위생분야 포함)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시설 9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321개소, 식품접객업 630개소, 숙박업 103개소 등 총 2,005개 시설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단속의 중점단속대상 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내에서의 오염행위와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지난 '99.9월 처음으로 지정된 팔당상수원 수변구역(255km)에 이어 현재 4대강 유역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변구역(1,062km, 전국토의 1.06%)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과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아울러 수변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400여개)하고, 수변구역내의 주기적인 순찰 및 반사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

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다이옥신 환경기준 금년중 마련

발암성, 면역독성 등 유해성과 환경·생태계 잔류성이 강해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금년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다이옥신의 국내 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매체별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고,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의 관계관과 각 부처 소속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추진 준비단」(단장: 환경정책실장)을 발족했다.

동 준비단은 지난 3월까지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정부·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로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허용섭취량 및 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관련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5년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한데 이어 대기, 수질, 음용수 등 개별 환경관계법령에서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 환경성은 1999년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일허용섭취량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에 대기·수질·토양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

과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99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감 잠재량 3천6백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금균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서베이(Survey)·진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동안 1,100개소 산업체(Survey 546개소, 진단 5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Survey 결과, 향후 5년 동안 약 3,600억원의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비는 7,000억원, 회수기간은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산업체의 에너지관리 실태는 IMF이후 기업규제완화에 따라 에너지부문에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기업내 에너지절약활동이 위축되는 등 에너지절약 추진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베이 조사업체 총 546개소의 44.1%인 241개 업체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서베이로 도출한 총 3,872건의 절감요인 중 884(33%)건만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업체 중 35.3%는 에너지전담자가 없이 생산·총무 등의 부서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내 에너지절약활동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

에너지절약투자에 있어서도 IMF이후 '외부차입에 의한 시설투자 기피', '시설투자의 열위'로 절약투자가 미흡하며, 정부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선호도는 높으나 자금 규모가 충분치 않아 적기지원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폐열의 72.7%인 557천 toe를 현재 재활용하고 있고, 서베이 조사대상의 76.9%인 420업체가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을 계획하고 있는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면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서베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손실요인들을 조기에 개선하고,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의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력 수요관리설비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제도 개선 ▲고효율 산업설비 수요조사·기술개발·보급시스템 강화 ▲에너지절약 컨설팅 기능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에너지절약시책을 도입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수소경제기반 구축 실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올해 세계 4대 산업 4강과 8대 무역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 앞선 무공해 무한에너지를 뜻하는 수소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체제개편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산업화 전략을 올 상반기중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에서 우선 시행할 시범프로젝트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실증단지 조성 및 첨단 단열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고효율주택을 건설에 대한 계획이다. 이날 이 장관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책으로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상반기중에 개발해 하반기에는 통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석유 중심 경제체제는 청정에너지와 같은 무한에너지 시대와 지속가능한 발전경제, 기술이 국력을 판가름하는 수소경제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며 수소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개발 경쟁이 국가간에 치열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특히 강조하는 부문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대외적 협상력과 대내적인 대응전략. 온실가스의 무부담 정도에 따라 충격은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부터는 2차 이행기간중 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95년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이 약 20%나 감소되면서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인식 제도개선 필요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환경관련 제도의 인식 및 운영·관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개발 및 운영과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입지유형, 지역 등에 따라 환경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운영·관리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입지유형별 조사에서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가장 어려운 환경문제로 폐기물(25.6%)을 꼽았으며, 수질(15%), 대기(10%), 악취(10%), 소음진동(10%), 민원처리(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개별입지 관리기관들은 수질(46%), 폐기물(17%), 악취(11%), 주변지역 녹지·경관 및 주거환경(11%), 대기(6%), 소음진동(6%) 등으로 응답,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환경규제에 대해 계획입지 기업들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적정하다(25.59%)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개별입지 기업들은 수정·보완이 52.2%, 적정이 41.3%로 그 차이가 적었다.

환경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계획입지가 연간 생산액 대비 각각 1.73%와 0.51%로 개별입지(설치비 1.32%, 운영비 0.21%)보다 높아 계획입지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 위반의 경우는 계획입지 44.4%, 개별입지 80.5%로 개별입지에 대한 지도단속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눈 지역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관리기관들은 가장 힘든 관리업무로 규제의 비현성(40%)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기업의 비협조(40%)로 응답,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 제고 및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리 특성상 가장 어려운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염배출원 파악(60%)이라고 답했다.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수도권(28.6%)이 수도권(19.4%)에 비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환경시설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은 수도권(1.83%, 0.55%)이 비수도권(1.48%, 0.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협력사업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은 부산에서 개최된 철강분과 제8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도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협력사업(ESP :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온스틸(주) 부산사업장에서 개최된 철강분과 제8차 실무회의(2. 24~2. 25)에서는 에너지절약 실증사례 및 사업장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하여 회원사간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 본부장(김대규)이 참석하여 VA, 최고의 이용 효율을 추구하는 E-Top프로그램,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 등 공단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앞으로도 ESP사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아울러 업체 여건상 초빙하기 어려운 해외에너지절약기술 전문가 초청세미나, 절약기술 연구개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협력사업은 유사 공정을 가진 제조업체끼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담당 실무자들이 정기모임을 갖고 각 업체의 에너지절약 실증사례

토론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이다.

현재 8개업종 191개사가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관련 공동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절약 기술협력 네트워크로 자리잡았다.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이치범 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초과승인제도 도입 및 융자대상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안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우선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가령 금년예산 700억원 보다 150% 많은 1,050억원)을 일괄하여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하여 융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동안 융자신청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승인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금을 조기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대상에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및 1회용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품으로 생산하는 자 등 친환경적 산업까지를 융자대상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제도는 1994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885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2004

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간 총 6,488억원이 융자신청 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여 금년에는 융자 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고객중심으로 개선·운영하고자 융자심사·승인에 따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확대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지난 1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올해 662억원 규모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은 지난해 대비(484억원) 37% 증액된 총 662억원으로 기술개발에 610억원, 기술인력양성에 52억원 등이 지원된다. 기술개발 중 전년에 비해 50%이상 증액된 에너지절약기술 지원금 380억원은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우수한 Star급 Project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청정에너지기술 지원금 90억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분리·이용, 연료이용 청정화 및 연소처리기술개발에 중점 지원된다. 47%이상 증액된 자원기술 지원금 121억원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탐사기술 등의 확보와 기초원료 소재의 기술 확보, 원료 소재화 기술개발에 투자된다.

또한 에너지기술인력양성 등 71억원의 기술기반조성 자금은 기후변화협약 협상력 강화, 에너지 관련 학술진흥의 다양화 및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해 그 동안은 선진기술의

국산화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현재 국내 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기술 대비 60% 정도로 약 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기술은 기술개발 위험도가 크고 공공성이 강해 정부주도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분야임을 감안해 산업자원부는 전력, 신재생 및 에너지·자원부문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에너지·자원R&D기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교토의정서 아닌 새로운 감축방식 촉구

지난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27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산업계는 현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을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97년에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10여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 감축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개도국들에게 적용이 유력한 '오는 2007년까지의 협상과 2013년부터의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인프리가 미흡한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정부, 기업, 시민, 학계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의 분위기에 휩쓸려 선불리 협상에 임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의는 또한 감축 목표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업종별로 저감잠재량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를 종합하는 상향(bottom-up)식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에 대해 인정해 주고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및 홍보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함에 있어 새로운 지구온난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산업계는 주장했다.

국가 참여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점에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등 기존 법에 온실가스 통계구축과 감축 지원방안 등을 보완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제정은 우리나라의 감축이행 능력이 과대평가돼 협상에서 오히려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과의 상충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에너지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기구에 기업측인사 포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는 21세기 물부족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청정 무한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내년께 음용수, 기능성소금, 화장품 원료 등 관련 제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해양심층수의 담수화 및 수질조정 연구, 심층수의 저온특성을 이용한 냉방과 제빙, 온도차 발전 등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연

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부는 오는 5월 강원도 고성군에 해양심층수 공동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8월경 취수관이 완공되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내년 이후에는 심층수를 이용한 먹는물, 기능성 소금, 화장품, 식품 등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또, 해양심층수의 품질 기준과 개발절차 등을 규정할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해 저온 상태(2℃이하)를 항상 유지하며, 영양분이 풍부하고 유기물과 세균이 거의 없는 청정 바닷물로서 양도 막대해 미래 유용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심층수를 이용한 상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음용심층수의 경우 일반 생수에 비해 1.2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심층수를 첨가한 식품, 음료수, 의료·건강상품 등이 800여종에 달해 시장 규모가 2조여 원에 이른다.

산업자원부, '제조업 환경영향 지도' 첫 제작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제품 제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총망라한 일종의 '제조업 환경영향 지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됐다.

산업자원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소장 조남선)와 환경부는 국가기반산업 및 기초소재 분야의 핵심 제품 307종의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 DB는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물질 현황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지구 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등 각종 환경오염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DB는 실례로 전기전자제품의 접합에 사용되는 '막대 땀납봉'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주석, 납 등 원자재와 전력, 경유, 등유, LPG 등 에너지를 포함한 81종의 투입물, 생산공정을 통해 대기나 수계로 나오는 235종의 배출물 발생 내역과 환경영향평가지수가 명시됐다.

구축된 DB는 전기전자제품(트랜지스터, 땀납,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에너지(경유, 석탄, 전기, 휘발유), 화학(나프타, 벤젠, 에틸렌), 금속(알루미늄판, 전기동, 순동판), 제지(신문용지, 인쇄용지), 건축(시멘트, 레미콘, 석고보드), 제조공정(프레스, 진공성형, 용접), 수송(트럭, 기차) 등의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DB를 이용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 친환경제품설계, 청정생산 기술의 적용성 평가, 환경성 적표지 인증,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환경자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DB 구축에는 관련 부처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애경산업 등 국내 대기업, 한화 환경연구소, 인하대, 아주대, 건국대 등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

「월간 '환경기술인」 정기구독안내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
- 구독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 852-2291(연합회 사무국)